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48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11. 29. (제 21차)

의
결
사
항

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
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3. 11. 29.

1. 의결주문

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 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하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외국환거래법」 상 은행의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>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10차, 제12차,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(2023.4.20., 5.9., 5.26.) 심의필
- 제17차, 제20차, 제2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3.9.21., 11.9., 11.23.) 심의필

<별지>

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서는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 과징금 231,390,795원 부과 건의

- 조치사유 : 외국환거래법 위반(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)

- 법적근거 :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제6항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제1항 제5호의2, 제5항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의2(과징금) 제1항, 제2항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 제4호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22조(인가의 취소 등), <별표2>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, <별표3>
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 제1항, 제4항
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4-2조(지급등의 절차) 제1항

2. 조치사유

가.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

□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4호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“증빙서류”)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
○ 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송금업무부는 2021.9.28.~2022.5.27. 기간 중 (주)◇◇◇◇◇◇◇◇ 등 4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(207건, 196,816,162불)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,

-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*하거나,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**

* 은행연합회 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」에 의하면 전자무역문서로 사전 송금방식 무역대금 지급 신청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으나, 신고서상 하자가 있거나 지급사유 및 타당성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·보정·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, 외환송금업무부는 지급신청서에 물품코드, 대표물품명 등을 누락하여 수입목적의 거래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송금

** 아래 <표> ‘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유형별 건수 및 금액’ 참조

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유형별 건수 및 금액

(단위: 건, 미달러)

위반유형(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)	거래내역	
	건수	금액
(1) EDI 사전송금 방식의 수입대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 미징구	131	78,373,982
(2) 증빙서류에 날인된 인감을 오려 붙인 것으로 의심	76	118,442,180
합계	207	196,816,162

<붙임>

관계법규

□ 「외국환거래법」

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업무상의 의무)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,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(이하 "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"이라 한다)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(영업소를 포함한다)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

5의2.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7.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

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2(과징금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3.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

□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

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1.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
4.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

제22조(인가의 취소 등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2]

등록·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2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(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,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.

가. 가중 사유

- 1)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,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.
- 2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감경 사유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4)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

2. 개별기준

해당 행위	해당 법조문	처분기준
바.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1항 제5호의2	업무정지 2개월

[별표 3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- 가.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20
- 나.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40
- 다.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
- 라.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70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2 제1호 나목1) 또는 4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가.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
- 나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

□ 「외국환거래규정」

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.

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·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, 지급신청서 및 제4-3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4-2조(지급등의 절차)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이 장에서 “지급등의 증빙서류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시장분석과	은행검사3국
연 락 처	2100-2906	3145-8360